

종합안전체험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연구**김태환**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The Study of Propriety Investigation for Establishment of
Multi-Experience Hall about Safety****Tae-Hwan Kim***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Yongin University***1. 서론**

최근에 발생한 수 차례의 풍수재해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부천 가스충전소 가스폭발 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씨랜드 화재사고, 동인천 인현동 화재사고 등의 대형사고들은 미연에 방지 또는 예방대책이 마련되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기에 범국민적으로 안전문화의 형성과 정착의 필요성을 증명하였다. 또한 최근 자연적 재해에 대한 피해의 우려도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에도 풍수해뿐만 아닌 지진과 같은 엄청난 자연재해에서도 안전지대가 아님이 입증 되고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최근 발생한 대형참사의 근본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 『관리자의 부주의』, 『책임의식의 결여』 안전과 관련한 가치관의 부재에서 유발되었으며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전반적인 인명 경시 풍조, 안전무시, 무사안일주의, 이기주의 등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겠으나, 안전 교육의 미비, 안전불감증 등의 원인이 가장 크다.

본 연구에서는 주입식안전교육에서 실습과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을 목적으로 우리의 현황과 외국과 비교하며 교육프로그램과 체험시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저 한다.

2. 체험관의 설립목적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 유발요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파악하고, 안전한 이용방법과 관리요령 등의 정확한 숙지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안전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물이 종합적으로 구성된 안전교육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이러한 종합적인 안전 교육시설이 국내에는 아직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안전 교육시설은 현장체험적이고 때로는 흥미요소를 가미한 상호작용적 교육을 가

능케 하는 교육시설로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교육시설을 건립하고 이 곳을 대국민 안전의식의 제고는 물론 안전의 생활화를 확산시켜 방재행동력을 향상시키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면이나 시간적, 공간적인 여러 가지 제약을 안고 있는 정규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므로 결과적으로 안전만을 전담하는 체계성을 갖춘 교육시설의 건립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 개개인의 성격과 지역환경에 맞는 안전의식 향상
- 체험형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교육성과 극대화
- 관람객 적극 참여도를 높이는 "실전체험교육장" 마련

3. 국내·외 사례분석

국내에는 안전을 주제로 일반시민에게 종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볼 수 없다. 단지 정부산하 안전관련 공영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가스나 전기홍보관 및 전문가 교육시설, 일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홍보관,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교통공원 등이 있을 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전문 시설의 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선진 외국은 일찍이 교육개혁법에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목표를 명시하고 교육 과정에 이를 포함시켜 조기 안전교육의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광활한 대지와 다민족국가 그리고 테러의 위협등 다양한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노출된 미국은 테네시주의 안전마을(Safety Village) 및 소방박물관, 필라델피아 등 각 지역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디즈니캐스트 등에 국민의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안전관련 재정을 지원하고 안전교육시설을 상시 점검하며, 주별·학교별로 학부모·자녀를 위한 안전교육자료를 개발해 정규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90년부터 중·고교까지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체험·실습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웃 일본은 교육법에 안전교육을 명시하고 안전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했다. 각급 학교엔 「학교안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교사용 안내서와 학습보조자료도 충분하다. 학부모들도 「엄마와 아이가 함께 배우는 안전교육」 등에 적극 참여한다. 또한 71년 결성된 유아안전클럽에서는 엄마와 3~5세 유아가 함께 교육을 받으며 다양하고도 체계적인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159개소에 이르는 방재체험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서울과 비슷한 규모인 동경도에만도 이케브끄로(池袋)·다치가와(立川)·혼쵸(本所) 등 3개소 이상의 안전관련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문화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독일은 도르트몬트의 DASA(산업안전·건강전시관) 등이 설치 운영되고, 스위스는 민방위교육훈련본부가 안전교육과정을 직접담당하며 가장 큰 특징은 사실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한 체험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실전 훈련시설을 갖추어 놓은 점이다. 예를 들면 건축물 붕괴유형별 현장체험 훈련시설, 가스폭발 실전체험 훈련시설, 비상사태 대비 자가급식제조 훈련시설, 충돌차량 실물 구조훈련 시설, 제방 축조 훈련시설, 각종 구조장비, 목재 소화훈련 시설, 장애인 및 부상자 휠체어 이송훈련 기구 및 시설, 화생방 훈련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교육방식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이론교육을 배제하고 소화·인명구조·화생방훈련 등 모든 과정에서 소수인원으로 조를 편성하여 완전히 숙달이 되도록 철저하게 체험위주의 실전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상황에 대비한 생활안전훈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이, 유아시절부터의 안전교육 미흡과 주입식교육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전의식의 낙후와 생활화 부족으로 각종 후진국형 인재(人災)의 발생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그 피해 정도를 실로 가늠할 수 없으리라 예상된다.

4. 전시 및 운영 프로그램

4-1. 운영의 기본방향

안전종합체험시설의 운영방침은 비정규교육기관으로서 학교나 전문교육기관과 같은 정규교육기관에서 할 수 없는 즉, 시공간적으로 비형식적인 입체적인 교육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는가에 관건이 있다. 따라서 크게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관람객서비스 세 가지 면에서 운영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4-1-1. 전시

실제를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생동감 있고 상호 작용적이며 체험적인 전시를 통하여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을 숙지시킨다. 즉, 안전체험장은 상호작용적 전시로 구성되어 관람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전시물을 조작, 탐색하고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 스스로 내용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공간으로 가족 및 일반의 자유관람과 안내자에 의한 투어도 가능한 일반적인 전시관과 유사한 운영이 가능하고, 예약단체 및 현장에서 인원별로 결성한 단체를 대상으로 마련되어진 여러 코스 중에서 택일하여 안내자의 감독에 따라 실습하는 적극 참여식 전시교육공간으로서의 대상에 따른 교육의 심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도 있다.

4-1-2. 교육프로그램

안전종합체험시설의 상설 체험코너를 이용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참여식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 더불어 살아있는 안전 체험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전시가 하드웨어적인 개념이라면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관람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소프트웨어의 개념이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고취차원에서의 실습프로그램에서부터 심도있는 대처훈련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실현이 가능하다. 단, 전문교육시설을 요하는 전문교육프로그램은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한다.

4-1-3. 관람객서비스

여러 유형의 관람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신속히 제공하고 문제에 능숙하게 대처함으로써 편안하고 효율적이며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람객서비스는 자칫 획일적이고 고정적인 운영을 초래하는 단일함을 탈피하여 항상 관람객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하고 개선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관람객 우선주의 운영은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무거운 자금부담을 수반하지만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열쇠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훌륭한 교육내용을 가능한 한 편안하고 자유롭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사명감이 희생으로 배어 있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서비스는 안전종합체험시설의 입장과 시설이용을 공동목적의 적정요금으로 유료화 하는 방법을 통하여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전체운영예산은 정부지원 예산, 운영수익, 유관기관 지원금으로 충당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운영의 주체

안전종합체험시설의 운영주체는 교육의 효과성, 예산의 경제성, 집행의 일관성, 운영의 수익성 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후보로 꼽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민안전단체 그리고 개인위탁의 경우를 열거할 수 있으며 운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4-2-1.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로 운영되는 경우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확보에 무리가 따라 충분한 서비스 및 전문요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4-2-2. 시민안전단체

시민안전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전문성 및 운영상 일반 봉사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등 홍보 면에서 효과적인 점이 많으나 재정지원 및 운영상의 조직체계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각 지방 자치제 및 중앙 정부의 조직체계에 산하조직으로 공동 운영되는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2-3. 개인위탁

개인에게 운영을 일임하는 경우는 전문운영요원 확보가 수월하고 서비스 향상 차원에

서는 우위를 차지하는 등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나, 문제점은 한 곳에 운영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운영의 합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 운영주체의 개별적 장단점을 고려할 때 안전종합체험시설의 운영관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운영주체가 되고 유관공영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공동투자, 관리하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예산의 운영성과 집행의 일관성 면에서 정부기관이 운영주체가 되고 교육 및 서비스의 질 향상과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유관공영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전문요원 투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육대상자도 학생단체는 시, 도교육청에서, 기업임직원은 유관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연간 목표치 유치를 확보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케 할 수 있다.

5. 결론

우리나라는 전후 낙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국가정책 결정자들이 안전정책을 뒤로 한 채 경제부흥 위주로 국가정책을 이끌어 온 결과, 빨리빨리 문화가 뿌리깊게 정착하게 되어 안전 불 감정을 낳고 있으며, 대형사고나 재난, 재해가 발생 할 때마다 예방이나 대응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재해나 사고를 경험하면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런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에서 겪는 참사의 비극은 발생 빈도로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전체로서는 체험한 사람이 적고, 비극의 아픔이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간다. 결국 피해 당사자나 비참한 경험을 한 사람은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인간사회에 있어서 귀중한 체험이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중요한 사실이 잠재되어 있어 보다 나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재산으로서 활용하지 않으면, 또 다시 참사가 악순환 되는 사회에서 탈피하지 못한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선진외국은 지난 몇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각종 사고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안전에 대한 교육과 체험적 공간을 통한 훈련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우리 보다 잘 준비되어 있고 원활하게 운영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전체험관의 설립 타당성은 그 당위성이나 건립을 필요성을 원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누구나도 자유롭게 체험관을 방문하여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국민 속에 잘못 뿌리 박힌 안전문화불감증을 단계적으로 치유해 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실정과 재해유형에 맞는 적정규모의 안전체험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도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국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시도별로 1~2개소 정도의 유사 안전체험관을 건립, 국민의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선도적 기관으로 자리 매김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물규모 면에서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독일의 직업건강·안전전시관이나 일본의 방재관처럼 거대규모의 시설을 갖출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제반

실정에 맞는 재해, 재난, 사고유형별 다양한 체험습득을 위한 시설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생활안전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풍부한 도서 및 영상자료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은 안전체험관이 가야할 기본 전략이 될 것이다.